

정부출연(연)의 바람직한 역할방향과 효율화·일류화 추진방안에 관한 종합토론회

## 정부출연(연) 일류화, 과연 가능한가



글 | 이강봉 \_ 사이언스타임즈 편집위원 aacc409@naver.com

**정**부출연(연)이란 정부가 출연금을 통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학은 교수 1인 중심의 연구 시스템이지만, 출연(연)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연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된 기초, 거대과학 등 대형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반면 승급 및 처우 체계 등이 법률로 명시되고 있는데다, 연구원들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체계를 부여받고 있어 조직문화가 수직적이며,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로부터의 우수 과학자 유치가 차단되는 등 폐쇄적인 문화는 연구개발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는데, 이 같은 문제들을 놓고 최근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는 대토론회가 열려 큰 주목을 받았다.

### 출연(연) 역할 재정립 절실

지난 2월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주최로 열린 '정부출연(연)의 바람직한 역할방향과 효율화·일류화 추진방안에 관한 종합토론회'에서는 출연(연) 및 재정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학계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 오전, 오후에 걸친 8시간 토론을 진행하면서 출연(연)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출연(연)의 역할 정립(1부), 경영개선(2부), 성과(3부) 등 3가지 주제를 갖고 3부에 걸쳐 진행됐는데, 첫 번째 주제인 출연(연)의 역할 정립과 관련, 김상선 과총 사무총장은 "선진국들은 R&D 기능을 강화하면서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며 국내 출연(연)도 이제는 바뀌어야 하며, 그 대

안으로 출연(연)의 역할 재정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출연(연)의 바람직한 역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출연(연)에 보완해야 할 주요 기능으로 미래 기초·원천기술과 공공복지 기술 등의 R&D 기능, 정부 각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저 기능,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

수립과 관련된 싱크탱크 기능, 연구개발 정보의 수집, 가공, 알선 기능, 그리고 국제과학기술 협력창구 기능 등을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같은 출연(연)의 역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장기 비전 및 R&D 로드맵 이행을 위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돼야 하고, 정책연구와 국제협력 등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직이 대폭 강화돼야 하며, 사실상 국가기관임을 감안해 연구원들이 국가연구기관과 대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선 과총사무총장

### WCI 사업·'KIST 허브' 프로젝트 본격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노환진 과장은 출연(연)의 연구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사업(WCI)' 과 병행해 '한국과학기술원(KIST) 허브'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환진 교육과학기술부 과장

노 과장은 최근 과학기술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인 고도화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교수, 연구원들이 해외 안식년을 선호하며, 선진국에서 재충전을 희망하는 이유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와 해외 연구기관들이 갖고 있는 분위기, 즉 사고의 유연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출연(연) 연구



제부 토론회

토를 선진국 수준으로 변화시켜나갈 경우 "국내 박사가 외국 박사보다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일본처럼 연구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WCI 사업과 'KIST 허브'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먼저 WCI 사업을 통해 우수한 해외 연구 인력을 개인, 그룹 단위로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수인력 유치(1~3년)를 위해 인건비, 연구비 지원수준을 세계 일류급으로 책정하고, 유치인원과 수준, 지원 분야 등의 권한은 기관장에 일임하되, 유치 단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 기준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CI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KIST 허브' 프로젝트의 골자는 1단계로 KIST 원장을 세계적 석학으로 영입하고, 2단계로 외국인 과학자를 전체 연구원의 10%까지 늘리며, 3단계로 출연(연)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온정주의, 비협조주의를 해소하는 대신 자율 가운데 실력주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4단계로 대학 교수 및 다른 곳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이 KIST에 와서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내용이다. 노 과장은 KIST에 연구중심대학(WCU) 기준을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해 다른 출연(연)의 연구능력제고 및 연구 분위기 쇄신 모델로 삼는 한편, 국내 연구기관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WCU 기준에 따르면 우수 외국인 과학자 유치 시 1인 기준 연 3억 원의 인건비와 연 1억 원의 직접비용, 연 2억 원 규모의 장비 지원, 전체 지원비의 30%에 이르는 간접비를 거주시설 등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제2부 토론회

WCI, 'KIST 허브' 사업과 함께 출연(연)에 국가 아젠다 연구, 대형·융합형 기초·선도연구, 박사급 인력의 수급 조절 기능,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정보관리, 기타 부수적 기능 등을 부여하고, 전문 인력관리제도 운영하면서, 연구 장비·시설 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건비 인상, 예산·기획 등 연구회 기능 대폭 강화**

두 번째 주제인 출연(연)의 경영개선책과 관련, 조성재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고문은 장·단기 과제로 출연(연)의 자율과 책임운영, 인적역량 극대화, 목적부합 평가, 신뢰회복 추진, 기관장선임제도 개선 등의 경영관리시스템 쇄신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율과 책임운영을 위해서는 단기 추진과제로 정부와 협의, 오는 2011년까지 3년 내 인건비를 7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장기 추진과제로 현재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 기획위원회를 연구회 중심으로 이전하며, 예산, 기획 등의 연구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나간다고 밝혔다.



조성재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고문

인적역량 극대화를 위해서는 출연(연) 우수 인력 충원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3년 내 출연(연) 정원을 30%까지 확대하고, 장기

추진과제로 연구원 이탈 방지를 위해 정년, 연금 등의 처우개선책을 마련하고, 개도국 연구 인력을 활용하며, 대학교수 겸임을 허용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또 목적에 맞는 연구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연구 성과를 3년 주기로, 경영 성과를 1년 주기로 절대 평가하는 방식을 조속히 도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부서와 기관

에 대한 심층 평가방식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현행 평가방식이 지나치게 대학교수 관점에서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 고문은 또 출연(연)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3년 내 연봉 차등지급과 영년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도입하며, 개인고과제도를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KIST 원장 선임을 해외에 개방하는 등 기관장 선임제도를 개선해 세계적인 수월성 연구 분위기를 조성해나간다고 말했다.

**연구소기업 설립 제도 등 하드웨어적 지원 필요**

세 번째 주제인 연구 성과와 관련해서는 조성복 기초기술연구회 전문위원이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조 위원은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지원과 함께 연구소기업 설립제도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복 기초기술연구회 전문위원

조 위원은 대형 기술이전이 가능한 KIST의 기술사업화 'PIPE' 시스템, 원자력연구원의 '전주기상' 성과확산 시스템, 스탠퍼드 대



제3부 토론회

학의 'TLO'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스탠퍼드대의 'TLO'의 경우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동시에 투자 및 투자자산 관리, 수익 극대화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등 R&D 성과 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며 기초·원천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의 펀딩, 상용화 R&D, 국내외 기술인력 및 기관과의 공동연구, 국내외 기술 수요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고문은 출연(연)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우선 (가칭)과학기술 육성법을 제정, 과학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과학 산업화 촉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연구사업화를 활성화하고, 금융 및 자금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사업화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출연(연)의 과학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과학을 기반으로 한 국가 신산업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른바 '사이언스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나간다고 주장했다.

### 제도적, 법적 뒷받침 없이는 실패 확률 높아

한편 이날 주제발표와 함께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중앙일보 박방주 부장은 “출연(연) 문제는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국정

책임자의 의지가 없어서 못 푸는 게 많다”며 “정책 입안자들이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은 특히 출연(연) 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예로 대학교수보다 4년이나 낮은 정년(61세) 문제를 꼽았으며, 연구원들의 문제점으로는 평등주의와 연공서열 선호 등 안일한 근무자세 등을 지적했다. ‘KIST 허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원장의 임기보장 등 특별법을 만들어 KIST를 집중 육성하려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며 “제도적, 법적 뒷받침 없이 추진하면 80~90%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준 고려대 교수는 “국내에 개발연구는 있지만, 기초·원천연구가 과연 있느냐?”며 예산 시스템을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영관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우수 인력이 대학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학 인력과 출연(연)의 연구 인프라가 서로 협력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원장을 뽑을 때 외국에서 석학을 모셔오는 방안도 대표성과 경영적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병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책연구센터장은 “출연(연) 성과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 센터장은 기초 과학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지난 10년 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처음에는 7억~15억 원에 불과하던 기술이 전료가 2007년에는 80억 원, 2008년에는 90억 원, 올해에는 잦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15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과학의 기술이전 성과는 초창기에 별로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경과한 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출연(연) 연구 성과에 대해 지나치게 압박하기보다는 때가 되면 나타날 연구 성과를 기대하면서, 지금도 밤을 새워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격려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㉔